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생산·수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
- ②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 ③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 ④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원행정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에 관한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ㄷ.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려면 주무부장관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장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5. A회사는 석유를 수입·가공·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이사는 甲이다. A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회사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A회사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하기 위하여 A회사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A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甲에게 석유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甲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출석 또는 훈련대상물자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국외여행 중인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자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등은 소속 공무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하고, 사용기관은 인도·인수 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가 발령한 훈련실시명령에 따른 훈련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② 중점관리대상 자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인력·물자 및 업체도 정부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훈련 실시의 대상이 된다.
 -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중에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시·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발령한 훈련실시명령에 따른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기간과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도상훈련과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④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②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직장 민방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소속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예비군의 대원일 경우라도 해당 직장의 장은 그를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는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가 면제된다.
- ③ 교육청에 소속된 공공영조물에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한다.
- ④ 민방위기술지원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원으로 중복하여 편성될 수 없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문 15. 甲은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이 동원 명령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치료하여야 하는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를 동원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甲이 소속된 민방위대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③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이 甲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방송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甲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지난 이후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원래의 사망 보상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도의 도지사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으로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해서는 B시에 소재한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甲 소유 시설의 이전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등화의 금지명령을 하는 한편, 丙 소유의 장비를 일시사용하는 조치를 하였다.

- ① 甲이 이전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A도의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② 乙이 등화금지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 소유의 장비를 일시사용하려는 때에는 A도의 도지사는 미리 丙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④ 甲이 이전명령에 따라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면 B시의 시장과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치료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ㄴ.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된 민방위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치료받은 경우, 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ㄷ.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ㄹ.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지휘.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읍.면.동장이 지휘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경우에도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 ③ 연합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 ④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의 지휘권을 행사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중보건의사로서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조직된다.
- ②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인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현역병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되면 그 사람은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 ④ 지원하여 지역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은 2년이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중 예비군자원이 75명인 직장의 장은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45명이라면 그 직장예비군을 소대로 편성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자치구의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할 수 있다.
- ③ 육군에서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육군참모총장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 ④ 서울특별시에 있는 같은 계열 직장들의 직장예비군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편성할 수 없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한 경우 그 직장의 장은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 ③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 ④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은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②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이 동원 보류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이들에 대한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재해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없다.
- ④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 발령지역에 있는 경우, 당해 예비군대원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무장공비가 마을에 침투하였을 경우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ㄴ. 수임군부대의 장이 긴급조치로서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긴급조치로서 주민의 재산을 제거한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수탁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비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손실증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①	O	O	O	O
②	O	O	O	X
③	X	X	O	X
④	X	X	X	X

문 24. 다음 중 예비군법령상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하는 일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를 받는 일
 ㄴ.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임무를 경찰서장으로부터 수탁하는 일
 ㄷ.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자원조사에 참여하는 일
 ㄹ. 수임군부대의 장의 위탁을 받아 긴급조치를 하는 일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문 25. 예비군법령상 보상대상자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상군경
- ②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
- ③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 ④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몰군경의 유족

문 26. 예비군법령상 벌칙 규정이 정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예비군훈련을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 받은 사람
- ㄴ. 본인 대신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지연한 경우
- ㄷ. 동원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한 사람
- ㄹ.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 ① ㄱ - ㄷ - ㄴ - ㄹ
- ② ㄱ - ㄹ - ㄷ - ㄴ
- ③ ㄹ - ㄱ - ㄴ - ㄷ
- ④ ㄹ - ㄷ - ㄱ - 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될 수 있다.
- ㄴ. 한국철도공사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ㄷ.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neg ② \exists
③ \neg, \sqsubset ④ \perp, \exists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유·무선통신망을 말한다.
-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항이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으로 행한 응급조치나 응급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통제단장이 응급조치로서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였다.
- ② 지역통제단장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였다.
- ③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의 권한 행사로서, 재난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위험구역을 설정하였다.
- ④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의 권한 행사로서, 재난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재난현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였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문 33. 경기도 A시 소재 LPG저장탱크의 폭발로 전력·통신 시설 등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어, A시 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대책본부장인 A시의 시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A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국가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A시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A시가 행하는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A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재난으로 사망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A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문 34. 충청남도 B시는 지역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야간 불꽃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B시의 시장은 야간 불꽃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B시의 시장이 작성하는 야간 불꽃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지역축제의 개요,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다중밀집시설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 대비 재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충청남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B시의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충청남도지사는 야간 불꽃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 35. 경상북도 C시 전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우 커서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C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되, 조사단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 ③ C시 지진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C시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I - 헌법

문 1. 영토 및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남북한이 동시에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현행법상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③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에 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하는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어업이 불가능하다.
- ④ 개별 법률은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문 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8년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원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1954년 개정헌법은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게 함으로써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 ③ 1962년 개정헌법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 ④ 헌법상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관련규정은 1980년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최저임금제는 1987년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문 3.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가 포함되기에 선거를 통한 농업협동조합 이사 선출행위는 결사 내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고, 이사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 ②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특정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는 법률은, 한편으로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단체제도를 입법자가 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자, 동시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문 4. 학문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 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진리탐구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④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문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징벌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나, 건강이나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문 6.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므로,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문 7.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태아’와는 달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법(私法)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라는 법치국가이념에 의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 ㄷ.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ㄹ.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①	O	O	O	X
②	X	X	X	O
③	X	O	O	X
④	O	X	X	O

문 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ㄴ.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 ㄷ.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공포도 환부도 하지 않은 때에는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 경과함으로써 법률안은 확정되며, 이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ㄹ.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 | |
|-----------|-----------|
| ① ㄱ, ㄴ | ② ㄷ, ㄹ |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문 9.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는 자율권의 한 내용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지만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 ②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와 기능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혐의 있는 경우라도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③ 국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국회는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0. 헌법상 국가기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11.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 ②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 ③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 ④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문 12. 국회의 재정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예산에 관한 국가권한 중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 ②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 1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형사보상청구권과 더불어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 ④ 구조금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문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정년은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전단계로서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는다.
- ③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법원조직법」상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종류가 있다.